KIEP 북경사무소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한중경제포럼
제18-6호 2018년 12월 28일

2018년 제2차 KIEP 방문학자 포럼

〈포럼 개요〉

- 행 사 명: 2018년 제2차 KIEP 방문학자 포럼
- 주최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 장　　소: 베이징 로즈데일 호텔 2층(兰花廳)
- 일　　시: 2018. 12. 5(수) PM 14:30~17:30

* 프로그램

시간	주요 일정
14:30~14:40	▲인사말: 정지현 KIEP 북경사무소 소장
14:45~15:35	【1세션】 ① 국제경제 지형 변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줘촨창(左传长) 연구원) ② 2018년 대두 교역을 통해 본 중·미 무역전쟁 추세 (중국 상무부연구원 쉬창원(徐长文) 연구원) ③ 핵무기 포기 후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 전망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런밍(任明) 교수)
15:50~17:00	【2세션】 ④ 중국 실물경제의 발전: 문제점, 원인 및 대책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소 성차오쉰(盛朝迅) 연구원) ⑤ 중국 철강업의 과잉생산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 (중국거시경제연구원 리우셴웨이(刘现伟) 연구원) ⑥ 중국 동북지역 신경제 경쟁력 분석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후원롱(胡文龙) 부연구원)
17:00~17:30	▲자유토론

【 1세션 】

① 국제경제 지형 변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줘촨창(左传长) 연구원

1. 세계화의 난제와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s trap)[1)]

- 중국은 일관되게 '다자무역질서 유지, 글로벌화 추진'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트럼프정부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제일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역 세계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세계화를 통해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국적 기업이 빠르게 발전하였지만,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 세계 고용창출 구조에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일부 국가는 저임 노동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남.
  - 또한 세계화로 국가 간 격차가 축소되었지만(예를 들어 중국의 고속 발전), 미국 제조업 노동자의 실업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감소, 중국의 산업별, 지역별 빈부격차 확대 등 각국별로 국내적으로 빈부격차는 확대되는 문제가 나타남.
- 하버드대 대니 로드릭(Dani Rodrik) 교수는 저작 『세계화의 역설』에서 '한개 국가가 세계화, 국가주권, 민주주의 등 3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음'을 강조하였음.
  - 예를 들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공동화 등 자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났고 중국은 국가이익과 세계화를 견지하고 있는 대신 민주주의를 대가로 함.
- 이러한 배경하에 국제시스템은 글로벌 공공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 붕괴되는 '킨들버거 함정'에 직면하게 됨.

2. 중·미간 쟁점

- 미국 예일대학 로버트 트리핀 교수는 저작 『황금과 달러의 위기』에서 어떤 국가든 그 국가의 통화가 국제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경우 그 국가의 통화제도 안정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세계경제 발전에 따라 각국이 보유한 기축통화도 증가할 텐데 이 경우 기축통화 발권 국가는 적자를 유지하게 되며, 나아가 동 국가의 통화는 절하평가 될 것임.
  - 다만 기축통화 방식의 통화제도는 안정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적자를 지속해서는 안 됨.
  - 이러한 상황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국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됨.
- 중·미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정보 · 기술 · 문화 · 제도 · 금융 분야의 분쟁도 포함하며, 장

1) 킨들버거 함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 부흥계획인 마셜플랜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의 이론에서 나옴. 즉,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된 미국이 자유무역질서의 공공재 공급하는 제공하는데 실패한데서 비롯됐다는 설명임.

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중·미 무역전쟁이 언제, 어떤 결과로 중지되든, 양국은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경험을 점점 더 많이 참고하고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됨.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Paul R. Krugman) 교수는 1999년에 '먼델-플레밍' 모형에 아시아 금융위기의 실증분석을 결부시켜 '불가능한 삼위일체 이론(impossible triangle/impossible trinity theory)'을 제출하였음.
  - '불가능한 삼위일체 이론'이란 한 개 국가는 자본이동의 자유, 통화정책의 독립성, 환율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임.
- 중·미 무역전쟁 배후에는 미국의 국제 패권지위를 지키려는 욕망(국제이익)과 트럼프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국내이익)간 갈등,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정에서 환율변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보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실효 등 각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국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 수용해야 함.

3. '공동'에 대한 구상과 미래

- 공동의 거버넌스 마련
  - 중국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선호하고 미국은 양자간 무역주의를 선호하지만, 다자든 양자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패권주의를 통해 형성되는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차이점을 봐야함.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뿐만 아니라 '10+3', '중·일·한 FTA', '동북아 협력' 등 지역 통합에서도 협상을 중시하고 협력을 강화함.
- 공동 건설
  - 킨들버거 함정에 대해 향후 전 세계 질서나 공급재는 미국이나 중국 등 단일한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참하여 공동 건설해야 함.
- 미래 공동 향유(share)
  -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참하여 공동 건설한 세상을 모든 국가의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2018년 대두 교역을 통해 본 중·미 무역전쟁 추세

중국 상무부연구원 쉬창원(徐长文) 연구원

❑ 중·미 무역분쟁 발발

- 중·미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미국은 최고 선진국, 중국은 최대 개발도상국임.
- 양국간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보완성이 커 무역도 빠르게 발전하였음.
- 양국간 무역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역 수지 문제임.
  - ◦ 중국 진출 미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역수출하고,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상품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원인으로 중국의 대미 흑자와 미국의 대중 적자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대두 등 농산물을 수입할 수 밖에 없음.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무역적자 현황을 단기 내 변화시키기 위해 무역전쟁을 일으킴.
  - ◦ 5월, 미국 므누신 재무장관과 중국 리우허 부총리는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두 차례 협의한 바 있음.
  - ◦ 하지만 6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양측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무역전쟁을 개시함.
  - ◦ 이어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 추가관세를 부과하자 7월 7일 중국도 340억 달러의 미국상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음.

1.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량 대폭 감소

❑ 미국의 대두 수출과 중국의 대두 수입 현황

- 중국은 연간 세계 대두 무역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1억 톤을 수입하며, 미국 대두의 최대 수출대상국이기도 함.
-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자 대두 수입량을 늘였으며, 2017년 대미국 대두 수입량은 3,285만 톤(미국 대두 수출량의 62%, 중국 대두 수입량의 34%)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8년 7월 중·미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면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두 관세율을 인상하였으며, 10월 중순 기준 미국의 대중 대두 수출량은 전년대비 94% 감소하였음.
  - ◦ 한편 지난 9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대두 총량은 13만 2,000톤에 불과하였는데 같은 기간 중국은 브라질로부터 795만 톤의 대두를 수입하였음.
- 중·미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EU 및 아시아 기타 국가와 대서양 지역 수출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예를 들어 지난 8월 미국의 대EU 대두 수출량은 전년대비 2.9배 증가한 108만 톤, 아시아 기타 국가와 대서양 지역 수출량은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156만 톤을 기록

- 미국은 중국을 대신해 기타 국가 및 지역으로의 대두 수출을 추진했으나 전체 규모는 감소했으며, 최근 10년 내 처음으로 대두가격이 저가상품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중국이 미국 대신 브라질로부터 대두를 수입하면서,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이 증가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양자 간의 경제통상 관계도 대폭 개선되었음.

표 1. 2018년 8월 미국의 대 세계 대두 수출규모

수출대상 국가 및 지역	수출량(만 톤)	수출 증가율(%)
중국	13	-90
유럽(EU + 터키)	108	290
일본	13	-37
아시아(중국 제외), 대서양	131	85
아프리카	28	240
대만	12	230

2. 2019년 미국의 '농업위기'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트럼프 관세인상 조치 조정

❑ 미국의 '농업위기' 발생 가능성

- 언론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은 대두 수출량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풍작으로 인해 공급량이 수요량을 크게 초과하면서, 대두 재고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하여 대두 판매가격은 원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급락하였으며, 이는 미국 농민 가계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
- 이에 따라 콩 대신 옥수수와 밀 등의 농작물 재배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2019년 미국의 옥수수 재배량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대두 재배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옥수수의 재배원가가 대두보다 높기 때문에 영국 언론은 중·미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내년 미국에서 '농업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트럼프 관세인상 조치 조정

- 미국에서 대두 재배농민의 불만이 확대됨에 따라 트럼프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를 조정함.
- 지난 11월 1일 미국의 요청으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미 무역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통화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오랜 시간 중·미 경제통상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음.
  -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확대, 미국기업의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참가 지원 등 의견을 제출하고, 시진핑 주석은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가 좋은 발전을 가져올 것을 희망하였음.
- 11월 9일, 약 1년 5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중·미 외교안보대화가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되었음.
  - ◦ 중국은 협상을 통한 무역분쟁 해결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중국과 냉전을 벌이거나 억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양국은 '많은 문제에서 여전히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 무역전쟁은 더

이상 확대 되지 않고, 양국은 새로운 추과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에 합의함.

◦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관세율을 기존의 10% 내외로 유지 할 예정임.

◦ 양국은 협상을 지속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올해 부과한 추가관세에 대해 모두 취소 조치를 취할 것임.

◦ 양국은 상호 시장개방에 합의하고, 중국은 미국 상품 수입을 확대하고 새로운 개혁개방 과정에서 미국이 관심을 갖는 문제점을 점차 해소할 것임을 밝힘.

3. 중·러 간 광범위한 대두 무역 발전기회

❑ 중·러 무역 현황

- 올해 들어 중·러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1~10월 무역액이 전년대비 약 30% 증가한 8,725억 달러를 기록함.

◦ 그중 1~9월 중국의 대러시아 농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음.

- 현재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 농산물은 주로 대두, 유채씨, 밀, 옥수수 등을 포함함.

❑ 중·러 간 대두 무역 발전기회

- 미래 중국은 여전히 대두 수입의 큰 시장이며, 향후 러시아는 중국 대두의 중요한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준비가 이미 되었음을 밝혔는데 이는 중·러 경제통상 협력에 좋은 기회를 가져다줄 것임.
- 러시아 언론에 의하면, 러시아 극동지역에 약 100만 헥타르(ha)의 토지를 해외에 공급하여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 그중 50% 투자자는 중국인이고, 그 밖의 50%는 일본과 한국 등 국가의 투자자로 알려짐.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중·미 무역문제는 러시아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러시아는 보다 더 큰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음'을 밝힘.

③ 핵무기 포기 이후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 전망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런밍(任明) 교수

❑ 2018년 4월 20일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노동당 제7기 3차 전체회의에서 향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을 선언

- 향후 경제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이에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 및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계와 대화 노력 할 것임을 언급
- 2018년 4월 22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시대 경제발전 전략이 '핵무기-경제' 경제에서 '경제 우선의 단선 전략'으로 변화되었음의 내용을 담은 사설을 게재

1. 북한 경제발전 전략 전환 계기

❑ 북한 경제발전 전략 전환

-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핵무기 건설의 역사적 위업을 완성'하였음을 밝힘.
  - ◦ 북한은 2013년 3월부터 '핵무기-경제' 일원화의 국가발전 전략 실시 후 수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초에 핵무기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음'을 밝힘.
  - ◦ 북한은 '핵개발과 탑재수단 개발 과정은 모두 과학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한 것'이며, '핵실험과 ICBM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없고 북부 핵실험장도 역할을 다했음'으로 소개하는 등 '핵보유국'임을 시사했음.

❑ 북한의 '핵무기-경제' 일원화 국가전략은 국내 경제발전을 저해

- 북한은 1948년 건국 이후 계획경제, 독립적인 민족경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하되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 '국방-경제' 일원화, 선군경제, '핵무기-경제' 일원화의 경제발전 전략을 실시하였음.
- 북한 경제발전 전략은 국내 지향성 및 국방공업이 민생경제보다 우선인 전쟁대비 경제를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경제발전 전략은 건전하고 유효한 경제발전을 저해함.
- 김정은 집권 이후 저성장 국면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중고속 성장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함.

❑ 경제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실험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점점 강화되어 민생 관련 프로젝트도 제재범위에 포함되고, 중국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였음.
- 국제사회의 제재 하에서 북한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음.

◦ 중·북 무역총액은 전기 대비 60% 감소하면서 2010년 수준으로 급락하였으며, 석유 수입량 급감으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음.

◦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경제는 언제든 붕괴될 위험성이 존재함.

- 북한은 '핵 보유를 통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지만, 핵 보유 이후 '전 세계'를 잃게 되었음.
- 북한 지도층은 핵무기 포기가 없으면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는 영원할 것이고,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한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와도 경제 거래를 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됨.

◦ 즉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글로벌화 된 오늘날 북한은 경제적으로 고립된 국가로 전락할 것임.

❑ 핵무기 포기 후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내용

-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각항목별 지표를 완성하고, 전력 부족 문제 해결, 농업기계화 제고, 무역구조 개선 및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등을 실시할 예정임.

표1. 핵무기 포기 후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표	· 강성대국 건설
세부 목표	· 인민경제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수준 향상 · 부유하고 문명한 인민 생활환경 조성 · 인민 경제부문 간 불균형적인 상태 조정
경제독립 과제	· 원료, 연료 및 설비의 국산화 실현
에너지문제 해결방안	· 원유 등 자원 개발, 에너지 생산기지 건설
우선 과제	· 2016~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항목별 지표 완성 · 전력 부족 문제 집중적으로 해결 노력 · 농업기계화 비중 60~70% 수준 달성 · 무역구조 개선, 경제개발구 설립, 관광경제 발전 ·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전면 실시, 사회주의 책임관리제도 실시

2. 향후 전망

❑ 기존 북한 경제체제 특징: 계획경제 위주, 시장경제 부차적 실시

- 1990년대 북한은 경제성장 침체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부양능력과 장악능력이 뚜렷하게 감소했고, 이 시기에 시장 세력이 등장함.
- 시장 세력의 대두는 국민에 대한 정부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좋게 보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국민의 물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아직 시장 세력을 없앨 용기가 없음.
- 이러한 배경하에 현재 북한 경제체제는 시장이 계획경제의 '보조적인 공간'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가짐.

❑ 기존 북한 경제체제 문제점: 계획과 시장의 충돌

- 북한은 우선 계획경제 체제의 주요특징을 약화시킨 후 자원제약을 극복하는 정책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체제혁신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함.
- 아쉽게도 지금까지 북한정부는 체제혁신을 추진하면 반드시 계획경제의 일원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할 주관성을 가지지 못함.
- 하지만 현재 북한은 자원제약으로 인한 국가 공급시스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장의 존재와 발전을 허락할 수 밖에 없고 시장과 게임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임.
-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북한정부는 계획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이는 시장 세력과 상호 충돌 및 상호 타협하는 현상이 타나날 것이며, 계획과 시장의 주기적인 충돌도 계속될 것임.

❑ 북한 기존 경제체제의 존속과 변화가능성

- 북한은 단기내 계획 경제체제를 유지하겠지만, 계획 경제체제 틀 안에서 제도혁신의 압박이 점점 확대될 것이고,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탈계획경제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 경제특구의 시범효과와 견인효과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화 효과가 점점 뚜렷해질 것이고 체제내 경제와 체제외 경제의 갈등이 점점 부각될 것임.
- 북한은 국가공급 능력에 따라 경제에 대한 국가의 파악능력을 마지노선으로 하여 시장 요소를 조정할 것인데 시장의 주도하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존 궤도를 점점 벗어나서 점진적으로 전환될 것임.

【 2세션 】

④ 중국 실물경제의 발전: 문제점, 원인 및 대책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소 성차오쉰(盛朝迅) 연구원

1. 실물경제 정의

- (리싱(李星), 판줘쥔(范祚军)(2005)) 협의의 실물경제는 물질수단 생산, 판매 및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형성된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실물경제 특징은 사회생산과 재생산, 자금순환과 회전의 경제현상과 밀접히 관련됨.
- (청스웨이(成思危)(2002)) 중립적 관점에서 가상경제는 가상자본이 금융시스템에 의존하여 순환되는 각종 경제활동(돈을 통해 수익창출)을 말하고, 실물경제에서 직접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돈으로 노동자 고용, 원료 구입, 공장 건설 등을 추진한 뒤 원료와 노동자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상품 유통을 거쳐 거래를 통해 다시 돈으로 전환되는 '자본의 순환'을 거쳐야만 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
- (황룽잉(黄荣英)(2004)) 실물경제는 물질과 정신적 제품의 생산, 판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농업과 공업의 물질적 생산 활동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상업,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정신적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도 포함하며, 전자상거래, 인터넷 경제, 현대 미디어도 포함함.
- (가오궈량(高国梁(2011)) 광의의 실물경제는 상품 혹은 서비스 창조를 바탕으로 사회 물질·문화 수요를 충족시켜 가치를 체현하는 것을 말하며, ① 상품(서비스)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② 상품(서비스) 소유권과 사용가치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③ 노동을 통한 물질의 상품가치를 실현과 ④ 상품 공급수요 규칙을 근거로 함.
- 산업통계 관점으로 보면 실물경제는 △ 제1등급(R0, 제조업), △ 제2등급(R1, R0 · 농업 · 건축업 및 제조업 이외 기타 공업 포함), △ 제3등급(R2, R1 · 금융과 부동산 이외의 모든 서비스업)으로 구분함.
- 대부분 정의는 실물경제가 현대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주체이고, 가상경제는 장기적으로 실물경제를 벗어나서 발전하지 못한다는 관점에 공감대를 형성함.

2. 중국 실물경제의 문제점

- 중국의 실물경제는 경기둔화 속에서 △ 공업부가가치 증가율 둔화 △ 수익창출 난제(생산비용 상승) △ 구조전환 난제 등 어려움에 직면함.

그림 1. 중국 GDP 분기별 성장률(201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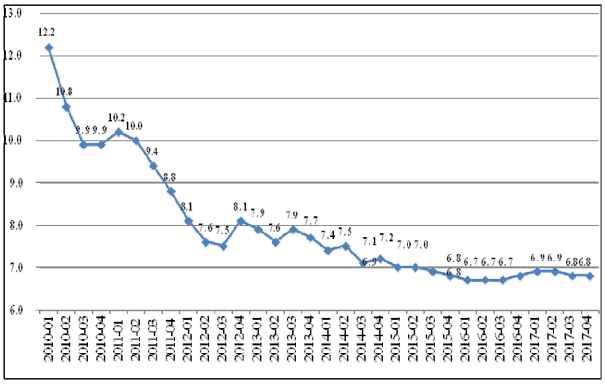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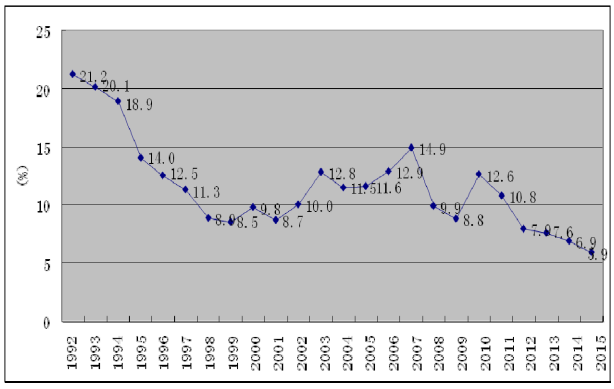


그림 2. 공업부가가치 증감 추이(1992~2015년)



- 특히 중국의 실물경제는 규모는 크지만 경쟁력이 부족함(大而不强).
  -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율(제조업 생산액 내 부가가치 비중)은 26%로 선진국 평균수준인 35%보다 낮음.
  - 중국의 제조업은 가공조립과 OEM 방식의 저부가가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생산효율이 낮음.
  - 중국의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는 3,000달러 내외로 선진국의 1/3에 불과함.

표 1. 중국 종류별 규모이상 공업기업 이익 비중 변화추이(억 위안)

연도	규모이상 공업기업 경상이익		민영기업		외자기업		국유기업	
	수치	전년대비 증가율	이익총액	비중	이익총액	비중	이익총액	비중
2011년	54,544	-	16,620	30.5%	15,494	28.4%	18,200	33.4%
2012년	55,577	1.9%	18,172	32.7%	13,966	25.1%	17,757	32.0%
2013년	62,831	13.1%	20,876	33.2%	15,802	25.2%	19,225	30.6%
2014년	64,715	3.0%	22,32	34.5%	16,577	25.6%	16,796	26.0%
2015년	63,554	-1.8%	23,222	36.5%	15,906	25.0%	13,189	20.8%
2016년	68,803	8.3%	24,324	35.4%	17,352	25.2%	13,610	19.8%
2017년	75,187	9.3%	23,753	31.6%	18,753	24.9%	18,825	25.0%
2018년 1~6월	33,882	-6.8%	8,889	26.2%	8,198	24.2%	11,297	33.3%
1~7월	39,038	-8.1%	10,215	26.2%	9,422	24.1%	13,092	33.5%
1~8월	44,248	-10.1%	11,486	26.0%	10,906	24.6%	14,815	33.5%
1~9월	49,713	-11.0%	12,592	25.3%	12,353	24.8%	16,843	33.9%
1~10월	55,212	-11.6%	14,132	25.6%	13,802	25.0%	18,418	33.4%
참고자료:								
2017년 1~10월	62,451	18.8%	20,286	32.5%	15,133	24.2%	16,042	25.7%

표 2. 규모이상 공업기업 이익 변화추이(2011~2017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상이익(억 위안)	54,544	55,578	62,831	64,715	63,555	68,803	75,187
전년대비 증가율	25.35	5.27	12.15	3.30	-2.30	8.5	21

표 3. 중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비용 관련 지표 및 변화추이

지표	연도			연간 성장률(%)	
	2005년	2010년	2015년	2005~2010년	2011~2015년
경상이익(억 위안)	14,803	53,050	66,187	29.1	4.5
매출액(억 위안)	248,544	697,744	1,109,853	22.9	9.7
매출원가(억 위안)	209,863	585,257	944,857	22.8	10.1
도시직원 임금 총액(억 위안)	6,830	15,068	34,797	17.1	18.2
부채 합계(억 위안)	141,510	340,396	579,310	19.2	11.2
매출관련 세금 및 기타(억 위안)	2,997	11,183	16,961	30.1	11.0
부가가치세 과세액(억 위안)	8,521	22,473	33979	21.4	10.9
생산비용 대비 이익률(%)	6.4	8.3	6.5	-	-

- 기술수준에서 볼 때 주요산업에서 핵심 기술, 부품 및 설비의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산업의 통제력이 약하고 보안 리스크가 큼.
  - ◦ 핵심기술: 컴퓨터 반도체 기술, 수치제어 장비 시스템 등
  - ◦ 첨단장비: 수치제어 공작기계, 선진 로봇, 첨단 해양산업장비 등
  - ◦ 핵심부품: 자동차 엔진, 변속기, 엔지니어링 유압부품 등
  - ◦ 주요 기초부품: 정밀 주조용 단조품, 첨단 모형 등
  - ◦ 신소재: 고분자소재, 고급강재, 첨단 비철금속소재 등
- 실물경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움.
  - ◦ 토지, 노동자, 자본, 기술 등 요소의 시장화 개혁이 완비되지 않았고, 합리적인 자원배치 메커니즘이 구축되지 못하였으며, 각종 진입문턱과 장벽이 여전히 존재함.
  - ◦ 특히 민영경제 발전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현재 △ 제도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 개인재산권 보호 결핍 △ 법적 환경 부족 △ 정부의 지나친 간섭 등 문제 뿐 만 아니라 민간자본의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여전히 존재함.
  - ◦ △ 과학기술 혁신체제 완비 문제 △ 정책 시행 문제 △ 사회분위기와 제도적 환경의 결핍문제 등으로 실물경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어려움.
  - ◦ △ 시장시스템 미비 △ 산업 퇴출메커니즘 불완전 △ 정부의 지나친 행정간섭으로 인한 자원, 상품, 요소의 지역간 합리적인 이동메커니즘이 아직 형성되지 못함.
- 실물경제와 과학기술혁신, 현대금융, 인적자원 발전 격차 존재
  - ◦ 우위요소의 발전이 불완전하여 질적 효율이 비교적 낮음.
  - ◦ 요소간 미스매칭이 점점 부각되면서 실물경제 고도화 모멘텀이 점점 약화됨.
  - ◦ 요소 조율 메커니즘의 비활성화로 인해 산업 시스템의 내생적인 활력이 부족함.
  - ◦ 산업시스템의 개방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제 분업에서 중 · 저부가가치 단계에 머물러 있음.

표 4. 중국 R&D 주요지표 및 선진국과의 비교

국가	삼극 특허의 전 세계 비중(%, 2013년)	1인당 R&D 지출(구매력 평가 달러, 2016년)	인구 1만 명당 R&D인력 밀도(명/만 명)	R&D 지출 비중(%)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만 건)
미국	26.32	1,580	-	2.74	219
EU	26.02	894	-	-	-
독일	10.23	1,434	141	2.94	60

프랑스	4.57	-	-	2.25	-
이스라엘	-	1,584	-	-	-
일본	30	1,328	137	3.14	266
한국	5.75	1,548	168	4.2	95
중국	3.51	326	48	2.12	124

3. 실물경제 문제점의 발생 원인

- 실물경제는 수입 감소와 비용 상승에 따른 '이중 압박(两头挤压)'에 직면함.
  - 최근 들어 PPI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기업의 업무수입이 감소하였지만, 생산비용은 급격히 상승하여 과거 저렴한 비용, 가격의 비교우위가 약화됨.
- 실물경제는 가상경제와 독점분야의 '이중 압박'에 직면함.
  - 금융, 부동산이 대량의 자금을 흡수하여 실물경제의 융자난과 융자비용이 높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일부 기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음.
  - 또한 경제가 둔화기에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는 유통 등 독점분야의 압박에 직면함.
- 실물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가의 '이중압박'에 직면함.
  - 선진국이 적극 추진 중인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 및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과 일부 신흥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제조업은 중국에 대해 '이중압박'을 형성함.

4.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 대책

- 5대 결합
  - 내생동력 강화와 양호한 발전환경 결합
  - '보유량 변혁'과 '증가량 궐기'의 결합
  - 실물경제와 가상경제 발전 결합
  - 비용절감과 공급의 질적 향상 결합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 결합
- 5대 대책
  - 실물경제의 발전방향과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함.
  - 개혁심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발전환경을 개선해야 함.
  - 통화 완화를 통해 실물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함.
  - 공급측 구조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실물경제 공급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함.
  - 실물경제에 대한 가상경제의 지지역할을 살려야 함.
- 결론
  - 중국의 실물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산업전환과 산업고도화를 통해 실물경제가 중·고 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함.
  - 전략적 신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키고, 전통산업을 고도화하며, '혁신위주, 요소조율, 체인 완비, 경쟁력 막강'한 현대 산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⑤ 중국 철강업의 과잉생산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

중국거시경제연구원 리우센웨이(刘现伟) 연구원

1. 배경

- 전 세계적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원·환경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이의 갈등이 점점 부각됨.
-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조강 생산이용률은 하락하여 현재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공급측 구조개혁 등 경제구조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림 1. 전 세계 조강 생산량과 설비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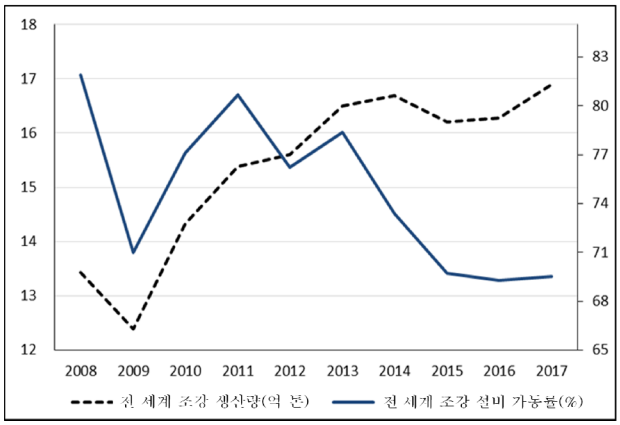


그림 2. 중국 조강 생산량과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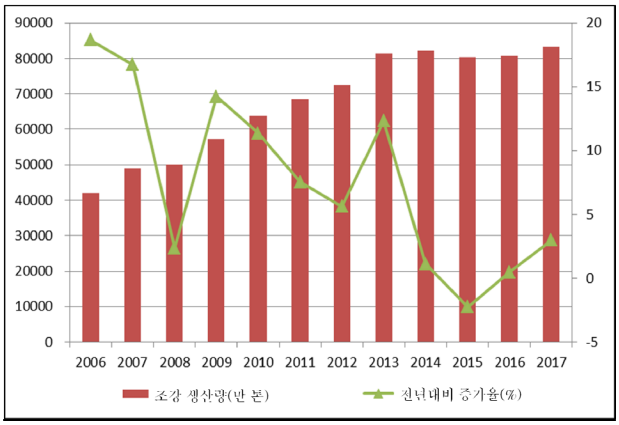


그림 3. 중국 조강 생산량과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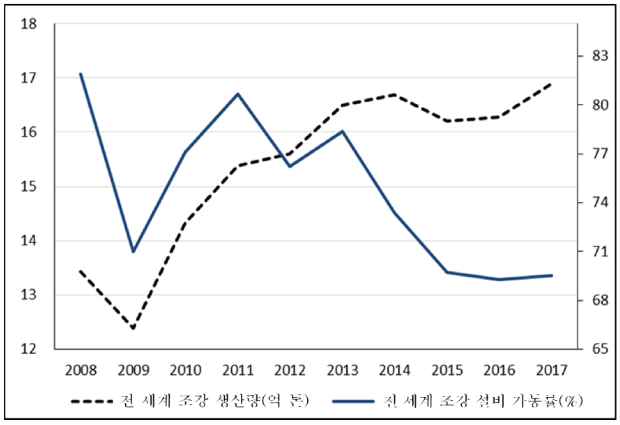


그림 4. 중국 조강 생산능력과 설비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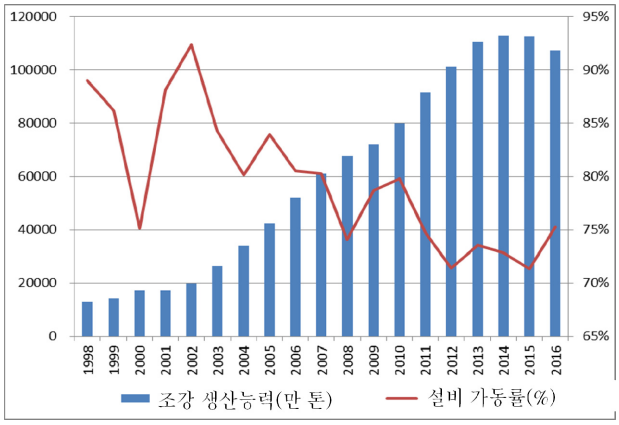


그림 5. 중국 강재 수출입 변화추이(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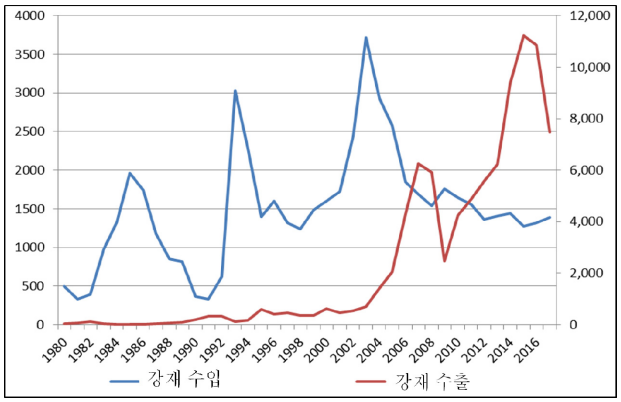


그림 6. 중국 철광석 수입과 대외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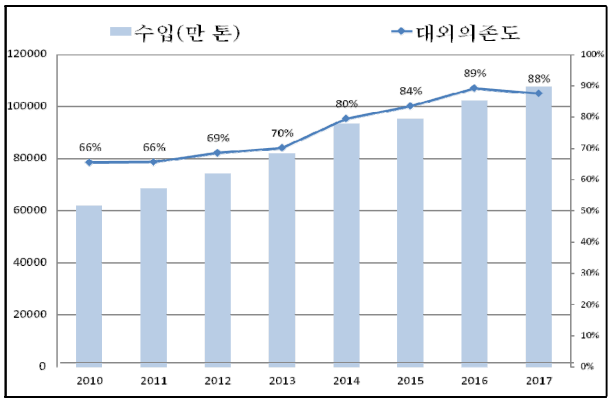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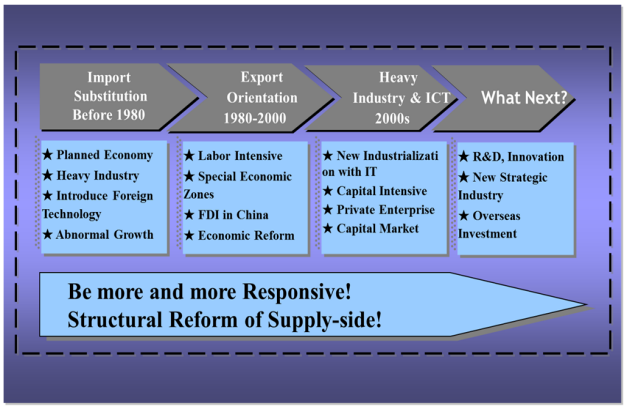


표 1. 중국 철강산업의 경영현황

연도	매출액 (억 위안)	이익총액 (억 위안)	이익률(%)
2006	15,542	1,039	6.68%
2007	20,700	1,600	7.73%
2008	27,030	928	3.43%
2009	24,187	599	2.48%
2010	30,819	932	3.02%
2011	38,720	895	2.31%
2012	38,629	17.1	0.04%
2013	39,809	225	0.57%
2014	40,900	278	0.68%
2015	30,600	-761	-2.49%
2016	26,636	200	0.75%

그림 7.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화



2. 주요조치

❑ 정책방안

- 중앙정부의 통합설계(頂層設計, 정층설계)를 통해 과잉생산 해소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확정하였음.
- 23개 정부부처와 산업협회가 연합회의를 구성함.
- 지방정부 주도의 책임과 감독검사 메커니즘을 구축함.

❑ 실시방법

- 조강 생산량 증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함.
- 기준을 높여 엄격히 집행하고, 낙후된 생산 능력 퇴출시킴.
- 법과 규정을 위반한 생산을 엄격히 단속함.
- 검수, 감독관리 및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함.
- 법과 규정을 위반한 생산기업과 지방정부를 엄격히 단속함.

❑ 자금지원

- 중앙재정의 자금지원
- 초과 완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 철강업 과잉생산 해소 효과

❑ 생산량 대폭 감소

- 2년 내에 약 1억 2,000만 톤 규모의 생산량을 감소시킴.
- 철강 설비 가동률은 75% 이상으로 향상시킴.
-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크게 기여함.

❑ 수익 대폭 증가

- 철강제품 가격이 약 100% 내외 상승함.
- 철강업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수익이 약 1,000억 위안 증가함.

❑ 보다 더 엄격해지고 규범화된 산업규제

- 약 2억 톤에 달하는 디티아오강(地条钢, 부적합 모조철강)을 퇴출시킴.
- 신규 생산을 단속

❑ 산업전환과 고도화 촉진

- 철강업의 M&A가 활성화됨.(예를 들어 우한철강(武汉钢铁)과 바오강철강(包钢钢铁)의 M&A를 통한 바오우철강(宝武钢铁)의 신규 설립)
- 기업의 상품과 기술혁신 능력이 증강됨.

3. 문제점 및 건의

❑ 문제점

- 중국의 철강업은 △ 혁신능력 제고 △ 한계기업(僵尸企业) 퇴출 △ 시장화된 생산 조정메커니즘 구축 △ 직원배치 △ 채무해소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의

- 중국은 철강업 발전을 위해 향후 △ 시장화 된 생산조정 메커니즘(시장에 의한 퇴출) 구축 △ 철강업의 표준 시스템 완비 △ 철강업의 M&A, 전환, 고도화 추진 △ 산업규제 정책 시스템 완비 △ 국제생산 협력을 추진해야 함.

⑥ 중국 동북지역 신경제 경쟁력 분석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후원롱(胡文龙)

1. 동북지역 신경제 발전 현황

❑ 판단근거

- 동북지역의 신경제 지수 산출(혁신능력 · 글로벌화 · 녹색화 · 디지털화 · 네트워크화 · 스마트화 수준을 고려)
- 41가지 세부 지표를 활용(공업경제연구소 산업경쟁력과제팀 분석)

그림 1. 동북지역의 신경제 지수(2015~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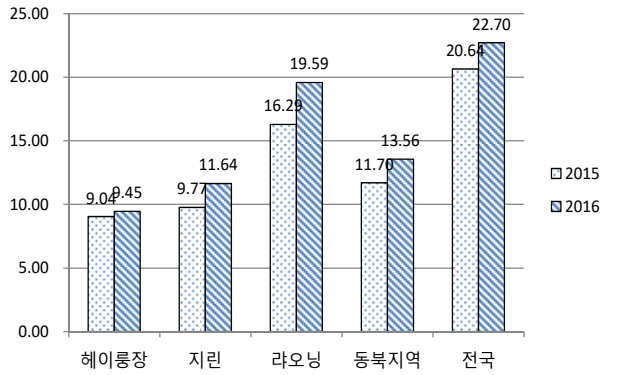


그림 2. 동북지역과 전국 신경제 지수 대비(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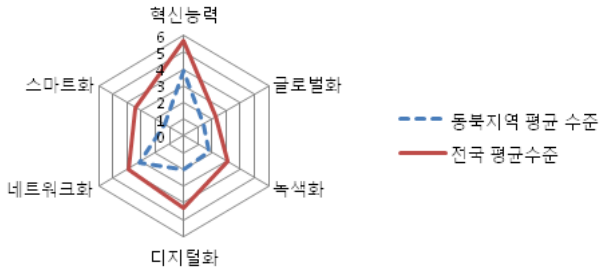


그림 3. 동북지역의 신경제 지수 변화(2015~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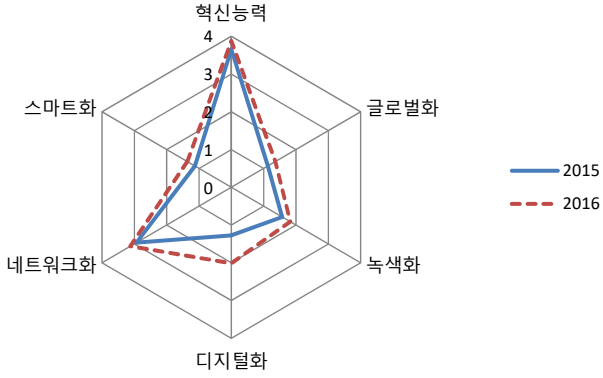


표 1. 동북지역의 신경제 지수(2015~2016년)

지표	연도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동북 평균	전국 평균
혁신능력	2015	3.2	3.06	4.71	3.66	5.66
	2016	3.1	3.13	5.41	3.88	5.72
글로벌화	2015	0.78	0.64	1.98	1.13	2.1
	2016	0.99	0.56	2.52	1.36	2.3
녹색화	2015	1.29	1.81	1.61	1.57	3.17
	2016	1.34	2.27	1.85	1.82	3.1
디지털화	2015	0.94	1.01	1.87	1.28	3.98
	2016	0.75	1.88	3.41	2.01	4.26
네트워크화	2015	1.99	2.29	4.53	2.94	3.63
	2016	2.24	2.55	4.59	3.12	3.93
스마트화	2015	0.83	0.96	1.6	1.13	2.1
	2016	1.03	1.26	1.81	1.37	3.39
총 지수	2015	9.04	9.77	16.29	11.7	20.64
	2016	9.45	11.64	19.59	13.56	22.7

❑ 기본 결론

- 전반적으로 동북지역의 신경제 발전 수준은 비교적 낙후되었으며, 동북지역의 신경제 발전 지수(13.56)는 전국 평균(22.7)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임.(그림 1 참조)
- 동북3성의 신경제 발전수준 격차도 비교적 크게 나타남.
  - 그중 랴오닝성의 지수는 19.59로 동북지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역내에서 신경제 발전 수준이 가장 높고,

이어 지린성, 헤이룽장성 순으로 나타남.

- 신경제를 구성한 혁신능력 · 글로벌화 · 녹색화 · 디지털화 등 6개 측면에서 볼 때, 동북3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그림 2 참조)
- 동북지역의 신경제 발전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2016년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동북지역의 신경제 발전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함.

2. 동북 3성의 신경제 발전 현황

❑ 기본 결론

- 동북지역은 네트워크화(3.12), 혁신능력(3.8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지털화(2.02), 스마트화(1.32), 글로벌화(1.36)에서는 크게 열위에 있는 상황임.
- (헤이룽장성) 혁신능력과 네트워크화 발전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녹색화, 글로벌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발전수준이 떨어짐.(그림 4, 5 참조)
- (지린성) 혁신능력, 네트워크화, 녹색화 발전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글로벌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발전수준이 떨어짐.(그림 6, 7 참조)
- (랴오닝성) 글로벌화, 네트워크화 발전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혁신능력, 녹색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발전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8, 9 참조)
- 랴오닝성 신경제 발전 지수는 2016년에 2015년 대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전국과 동북지역의 평균 증가폭을 초과하고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북3성의 신경제 발전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4. 헤이룽장성 신경제 지수(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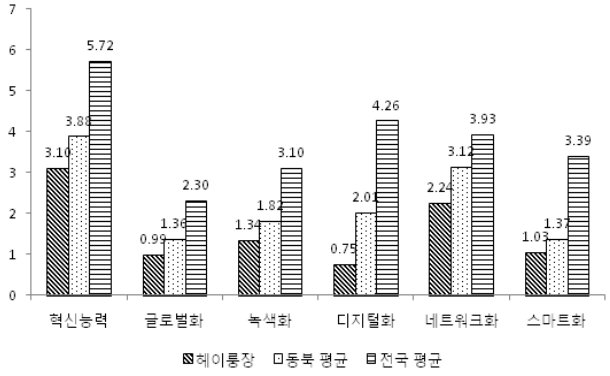


그림 5. 헤이룽장성 신경제 지수 변화(2015~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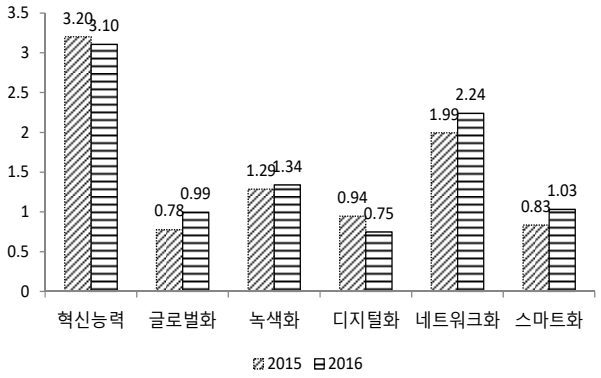


그림 6. 지린성 신경제 지수(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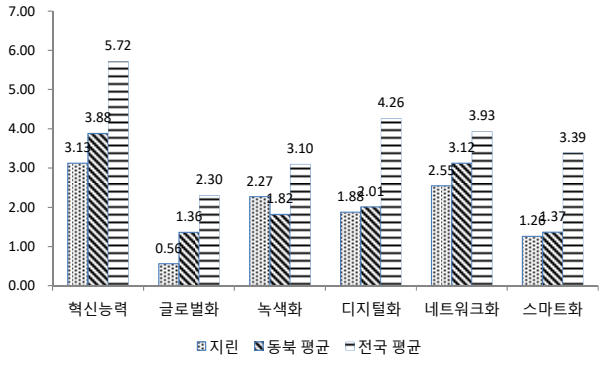


그림 7. 지린성 신경제 지수 변화(2015~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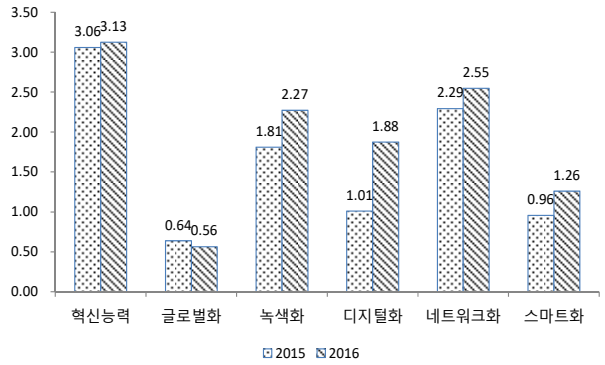


그림 8. 랴오닝성 신경제 지수(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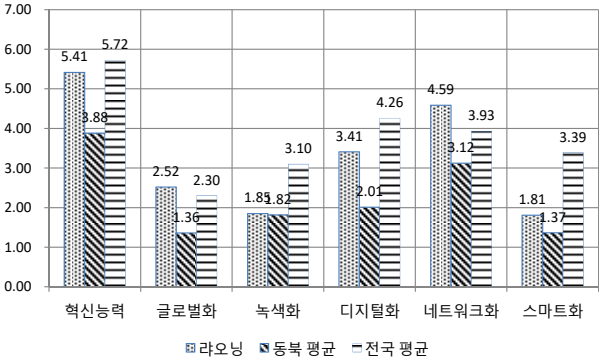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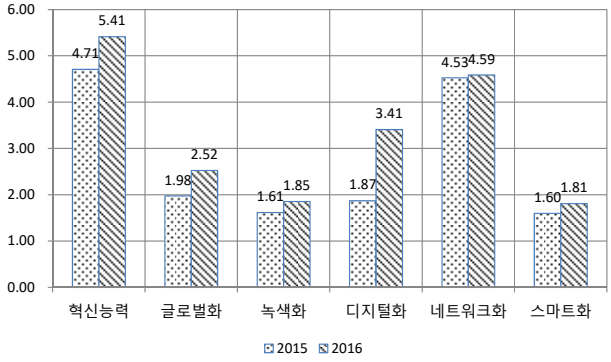


그림 9. 랴오닝성 신경제 지수 변화(2015~2016년)



3. 발전 정책

❑ 중앙정부의 주요 신경제 추진 정책

표2. 동북지역의 신경제 추진 관련 중앙정부 정책

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2016.4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전면 진흥 관련 의견 (中共中央国务院关于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中发〔2016〕7号)	(제12조) 신산업과 신업태 적극 육성 △ 동북지역 신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행동계획 제정 · 실시, △ 경쟁력을 확보한 신산업 발전 추진 △ 선양, 다롄, 창춘, 하얼빈 등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 중등규모 도시의 특색산업 클러스터 발전 지원 △ 신산업 발전단지 건설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지원 등
2016.11	동북진흥 '13.5'규획 (东北振兴"十三五"规划) (国函〔2016〕177号)	규획의 총 12장 내용 중 △ 제3장에서 '혁신발전, 진흥 · 발전 신동력 육성' 제출, △ 제5장 '구조고도화와 현대 산업시스템 구축'에서 '신산업과 신업태 발전 적극 추진' 전문 제출, △ 제8장 '지역 인프라를 지지하는 네트워크 강화'에서 '정보 인프라 건설 추진' 등
2016.11	신동북진흥 전략 실시와 동북지역 경제 발전 추진 관련 의견 (国务院关于深入推进实施新一轮东北振兴战略加快推动东北地区经济企稳向好若干重要举措的意见)(国发〔2016〕62号)	△ 동북지역 국가급 빅데이터 종합시범구 건설 지원 △ 동북진흥 신동력 육성 예산 수립 △ 하얼빈, 창춘 등에 창업과 혁신 플랫폼 건설 추진 △ 지린성 창춘, 헤이룽장성 하다치(哈大齐, 하얼빈, 다칭, 치치하얼) 공업회랑의 국가 자주혁신시범구 창설 지원 △ 지방정부의 신산업 창업투자 기금 설립 격려 △ 동북지역 국가 로봇혁신센터 구축 지원 등

❑ 헤이룽장성의 주요 신경제 추진 정책

표3. 헤이룽장성의 주요 신경제 추진 정책

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2016.9	'인터넷+' 행동의 지도 의견(2016년) (关于加快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2016年版))	① 농업 · 공업 · 에너지 · 교통운송 및 유통 · 금융 · 행정관리 및 서비스 · 신흥 서비스 · 녹색생태 등 8대 분야 ② '인터넷+' 응용플랫폼 발전, '인터넷+' 정부 공공서비스 플랫폼 등 중요 플랫폼 구축 등
2017.9	제조업 고도화 관련 '13.5'규획 (黑龙江省制造业转型升级"十三五"规划)	△ 차세대 정보기술 · 첨단장비 · 신소재 · 바이오의약 등 중점 산업의 발전 추진 △ 산업기초, 자원우위, 수요, 기술성과를 확보한 제조업 분야의 발전 가속화 추진 △ 제조업 혁신 · 스마트제조 · 녹색제조 · 생산협력 · 군민융합 · 브랜드 질적 향상 프로젝트 추진 △ 제조업 고도화 추진 △ 핵심경쟁력 강화 등
2017.8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관련 실시방안 (黑龙江省加快电子商务平台建设促进电子商务加快发展的实施方案)	△ 선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적극 육성 △ 각 시(지방)의 종합류 전자상거래 플랫폼 건설 지원 △ 농촌의 스마트물류 플랫폼 시스템 구축 △ 플랫폼 서비스 기업 발전 촉진 △ 모바일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추진 △ 전자상거래 모델 혁신과 기술혁신 가속화 추진 등
2017.10	대중창업 · 만중혁신 심층 발전 의견 (黑龙江省人民政府关于强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进一步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深入发展的实施意见)	△ 첨단기술성과 산업화 촉진 △ 기업의 융자루트 확대 △ 실물경제 고도화 추진 △ 인재 인센티브 보장메커니즘 구축 △ 정부 관리방식 혁신 등 정책조치 제출
2017.12	친환경산업 발전 추진 행동방안 (黑龙江省推进节能环保产业发展行动方案)	△ 에너지절약 기술 · 장비 △ 환경보호 기술 · 장비 △ 자원 순환이용 기술 · 장비 △ 에너지절약 · 환경보호 서비스업 등 4개 분야 21개 산업 발전
2017.12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발전 심화실시의견 (黑龙江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深化制造业与互联网融合发展的实施意见)	△ 대기업의 인터넷 '창업과 혁신(双创)'플랫폼 구축 추진 △ 중소기업 위한 '창업과 혁신' 서비스 플랫폼 구축 △ 프레딕스(Predix) 구축과 응용 추진 △ 공업화와 정보화 융합관리 시스템 응용 및 확대 △ 공업 빅데이터 혁신응용 심화 △ 공업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 핵심기술과 제품혁신 가속화 추진 등
2017.12	청정에너지 산업발전 추진 행동방안 (全省推进清洁能源产业发展行动方案(2017-2020年))	△ 풍력 발전 △ 태양광 발전 △ 바이오매스 발전 적극 추진 △ 중점 하류유역의 수력발전 개발 △ 지열에너지 탐사 및 사용 강화 △ 천연가스 개발과 사용
2017.12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혁신발전 의견 (黑龙江省人民政府关于推动新能源汽车产业创新发展的意见)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규모 확대, 핵심부품 R&D와 산업화 추진, 보급 확대 등
2018.2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 실시방안 (黑龙江省技术转移体系建设实施方案)	① △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 과학기술 성과 공급 강화 △ 기업이 기술혁신 주체가 되도록 노력 ② △ 통합적이고 개방된 기술시장 구축 △ 헤이룽장성 내 상호 연결된 기술거래 서비스 플랫폼 구축 ③ △ 기술이전 루트 확대 △ 과학기술 성과 관련 군민간 양방향 이전 등
2018.2	인공지능 산업 3년 행동계획(2018~2020년) (黑龙江省人工智能产业三年专项行动计划(2018-2020年))	① △ 인공지능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 국제수준의 기술인재 육성 및 유치 △ 인공지능 프로젝트(기술) 연구센터, 기업기술센터 등 건설 △ 개방형, 협동형 혁신 시스템 형성 ②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간의 융합 추진 ③ 제조업 스마트화 전환 적극 추진

❑ 지린성의 주요 신경제 추진 정책

표4. 지린성의 주요 신경제 추진 정책

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2015.12	대중창업 · 만중혁신 정책조치 실시의견 (吉林省人民政府关于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实施意见)	△ '인터넷+' 창업 네트워크 구축, 소형 기업의 창업 · 혁신 기지 건설 △ 국가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건설, 전자상거래 기업 육성 계획 추진 △ '6개 신규(六新,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 신제품, 신동력)' 특징의 신형 인큐베이터 발전 등
2016.4	'인터넷+' 추진 관련 실시의견	△ 선진제조업 △ 현대농업 △ 금융서비스 △ 고효율 물류 △ 전자상거래 △ 창업

	(吉林省人民政府关于积极推进吉林省"互联网+"行动的实施意见)	과 혁신 △ 녹색생태 △ 스마트 교통 △ 인공지능 △ 스마트 에너지 등 응용 추진
2016.4	전자상거래의 대대적인 발전을 통한 경제 신동력 육성 의견 (吉林省人民政府关于大力发展电子商务加快培育经济新动力的实施意见)	△ 전자상거래의 각 분야별 응용 확대 지원, △ 성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육성 가속화, △ 전통산업의 전환과 고도화 추진, △ 지역사회의 전자상거래 추진, △ 농촌의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 전자상거래와 물류업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 전자상거래 창업과 혁신의 집중적 발전 촉진 등 10조항
2016.5	택배업 발전 촉진 실시의견 (吉林省人民政府关于促进快递业发展的实施意见)	△ 택배단지 건설 가속화 △ 택배기업의 서비스 능력 제고 △ 교통운송과의 융합발전 강화 △ 특색 우위산업의 발전 △ 택배차량 통행정책 실시 △ '택배하향(快递下乡)' 프로젝트 추진 등
2016.8	'인터넷+유통' 행동계획 실시 의견 (吉林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深入推进"互联网+流通"行动计划的实施意见)	△ 체험식 소비 추진 △ 경영모델 혁신 추진 △ '라오즈하오(老字号, 전통 브랜드)'의 인터넷 브랜드 구축 △ 상품거래 시장 고도화 추진 △ 유통 혁신기지 발전 △ 유통 인프라 완비 △ 전자상거래와 택배 물류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등
2016.12	신동북진흥 전략 실시를 통한 동북지역 경제 촉진 관련 조치 (贯彻落实国务院关于深入推进实施新一轮东北振兴战略加快推动东北地区经济企稳向好若干重要举措意见的有关措施)	△'혁신 전환 추진, 발전동력 육성'에서 전통산업의 전환과 고도화 제출, △ 자원고갈, 산업쇠퇴 지역의 전환 지원, △ 신동력 육성, △ 혁신 매개물과 플랫폼 건설 등 4가지 조항의 27개 구체적인 내용 포함
2017.12	대중창업 · 만중혁신 심화 발전 실시의견 (吉林省人民政府关于强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进一步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深入发展的实施意见)	△ 과학기술 성과 전환 △ 기업 융자방식 확대 △ 실물경제 전환과 고도화 촉진 △ 정부관리 방식의 혁신 등
2017.12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실시의견 (吉林省人民政府关于落实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实施意见)	△ 지린성 인공지능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 첨단 · 고효율 스마트 경제 육성 △ 스마트 사회 구축 △ 군민융합 강화 △ 스마트화 인프라 시스템 구축

❑ 랴오닝성의 주요 신경제 추진 정책

표5. 랴오닝성의 주요 신경제 추진 정책

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2016.7	대중창업공간 발전을 통한 실물경제 전환과 관련 실시의견 (关于加快众创空间发展服务实体经济转型升级的实施意见)	(4대 과제) 전통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발전 추진,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기술이전 추진, 혁신과 창업 요소 촉진, 대중창업 공간 관련 국제협력 강화
2016.7	'인터넷+유통' 행동계획 실시방안 (辽宁省"互联网+流通"行动计划实施方案)	(7대 과제) ① 유통업 고도화 ② 유통업 혁신 발전 ③ 스마트 유통 인프라 구축 ④ 스마트 소비의 새로운 분야 개척 ⑤ 녹색 유통과 소비 발전 ⑥ 농촌 전자상거래 추진 ⑦ 지역사회의 전자상거래 적극 추진
2016.11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발전 심화 실시방안 (辽宁省关于深化制造业与互联网融合发展的实施方案)	① 제조업 기업의 인터넷 '혁신과 창업' 플랫폼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과 창업' 플랫폼 구축 ② 제조기술과 차세대 IT기술이 융합된 신형 산업발전 모델 육성 ③ 인터넷 인프라와 보안능력, 시스템 솔루션 공급능력 강화 ④ 체제와 메커니즘, 발전환경, 정책유도 등 측면에서 보장조치 실시
2016.12	산업(창업) 투자유도 기금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관리방법 (辽宁省产业(创业)投资引导基金直接投资科技创新项目管理办法)	△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투자 지원방향, △ 프로젝트 신청 조건, △ 조직관리 메커니즘, △ 프로젝트 투자방식, 비율, 기한 및 퇴출 처리 메커니즘 등 15조항
2017.2	랴오닝성 선양대학 국가 자주혁신시범구 '3년 행동계획'(2017~2019)실시방안 (辽宁省沈大国家自主创新示范区"三年行动计划"(2017-2019) 实施方案)	△ 성 산업(혁신) 투자유도기금 중 직접투자기금은 선양대학 자주혁신시범구 과학기술프로젝트 중점 지원 △ 선양대학 자주혁신시범구에 성급 행정·경제 등 심사관리 권리 부여 △ 입주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기업자격 인증과 재심사 추진 가능 △ 과학기술 성과의 수익 전환 및 R&D인력 대 성과전환 인력의 수익배당 비율 70% 이상 △ 과학기술기업 상장에 대한 조세우대 등 12조항
2017.12	랴오닝성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고도화	△ 첨단기술기업 및 주주에 대한 소득세 우대 △ 성 산업(창업) 투자유도 기금 우

	정책조치에 대한 통지 (辽宁省人民政府关于印发辽宁省加快高新技术产业开发区转型升级政策措施的通知)	선적으로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발전 지원 △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내 업체의 연구자금 사용 자체권리 확대 △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서의 연구성과 전환 지원 △ 외국인재 거주 관리 개혁시범 추진 등 11조항
2017.9	경제발전 신동력 육성과 신규 동력 지속전환 실시 의견 (关于创新管理优化服务培育壮大经济发展新动能加快新旧动能接续转换的实施意见)	△ 정부 서비스 능력과 수준 제고 △ 수용성 혁신에 대한 신중한 감독관리 제도 △ 신성장동력 요소 활성화 △ 지원 메커니즘 건설 강화
2017.12	정보소비 확대와 고도화를 통한 내수잠재력 활성화 실시방안 (辽宁省人民政府关于进一步扩大和升级信息消费持续释放内需潜力的实施方案)	△ 디지털 가전제품 보급 △ 응용 전자제품 확대 △ 정보기술 서비스 능력 향상 △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 건설 △ 정보 인프라 고도화 △ 정보소비 과정의 비용절감 △ 금융상품 서비스 혁신 △ 소비자 정보 기능 향상 등
2017.12	현(县)지역의 혁신유발 발전에 대한 실시의견 (关于县域创新驱动发展的实施意见)	① 혁신산업의 강현(强县) 전략 실시, 특색 우위산업의 전환과 고도화 추진 ② 기업 주체·시장 지향성·산학연 연계의 혁신 시스템 건설, 혁신형 기업 육성 ③ 인재 우선 발전전략 실시, 창업·비즈니스·인재 환경 고도화 등
2017.12	랴오닝성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辽宁省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 △ 첨단·고효율 스마트경제 육성 △ 안전·편리한 스마트 사회 구축 △ 인공지능 분야의 군민융합 강화 △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 중대 프로젝트 통합 배치 등 6개 분야 발전 중점

4. 결론 및 건의

❑ 결론

- 동북지역의 신경제는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임.
- 동북지역은 역내 신경제 발전 수준 격차가 큰 편이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동북지역은 혁신능력 · 글로벌화 · 녹색화 · 디지털화 · 네트워크화 · 스마트화 등 전 분야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디지털화, 스마트화, 글로벌화 등 측면에서 낙후된 상황임.

❑ 건의

-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경제 발전을 위해 조화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시장진입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신중한 감독관리 및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신용환경을 구축하고 안심하고 편안한 소비환경을 마련하며, 신형 소비방식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함.
- 동북지역의 독특한 자원·환경에 기반하며, 친환경·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함.